

자칭 “세계적 대통령” 노무현의 “끔찍한” 범죄들

자이툰 파병 재연장 시도

한미FTA 체결 추진
비정규직 악법 시행

반대한다



노무현 정부가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2007년 임무 종결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파병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5월 30일 밤 MBC <9시 뉴스>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을 연장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5월 31일치)는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국방부 장관 김장수에게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김장수 장관은 “파병 연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5월 31일 청와대 대변인은 “올 연말 철군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잡아땀다.

그러나 최근 한미FTA 협정문 공개가 보여 주듯이, 이 정부는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 자이툰 파병에 대해서도 그렇다.

2003년 4월에 “비전투병”만 파병하겠다고 정부는 그해 10월에 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다. 2005년 열우당 국방위 간사 김성곤은 이번이 마지막 파병 연장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파병 연장을 결정했다.

6월 2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을 갖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회담 직후 자이툰 파병 연장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 군대 주둔 연장과 지역

재건팀 참가 등을 미국이 요청했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올해 철군하는 조건으로 파병 연장된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장은 자이툰 파병 연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 묻은 떡고물

파병 재연장 추진의 명분으로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권이 언급되고 있다.

쿠르드 지역을 포함한 이라크의 석유는 이라크 상황이 나빠지는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자체가 석유를 노린 것이었다. 현재 미국과 이라크 꼭두각시 정부는 석유 다국적기업들을 위해 이라크의 유전 지역을 열심히 개방하고 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유전 개발권을 다국적기업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새 석유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이라크인들은 유류보조금을 철폐하라는 IMF의 강요 때문에 전쟁 전보다 열 배 이상 폭등한 가격으로 석유를 사야 한다.

점령 세력이 부추겨 온 종파간·인종간 반목은 석유 지배권과 이익 배분 문제 때문에 더욱 격해지고 있다. 특히,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등에서 아랍계와 투르크멘족을 겨냥한 일종의 소규모 ‘인종 청소’를 벌이고 있고, 이 때문에 종파간·인종간 폭력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

☞ 3면으로 이어짐

한미FTA와
반대 운동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
‘금속노동자의 힘’김성락 의장 인터뷰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라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이라크 미군 증파의 실패

3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특집
6월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 듣는다
최일봉 ‘다함께’ 국제연락간사

6~7면



반대 시위에 강타당한
G8 정상회담

5면

수단 다르푸르의 비극을
UN이 해결할 수 있을까

8~9면

비정규직 악법과 노동자 저항

—뉴코아·타워크레인 투쟁

11면

고리채와 ‘편의 전쟁’

2면

http://www.
counterfire.or.kr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자이툰 부대 철군을 위한
반전 행동!

이라크·아프간 점령 종식!
이라크·아프간 파병 한국군 철수!
레바논·파병 반대!

일시 : 6월 10일(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역 광장(집회 후 행진)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www.antiwar.or.kr / antipabyeong@empal.com / 02.795.4337



인용해도 될까요?

“가진 자들이 양보하자는 게 내 공약의 핵심 … 대미 자주노선을 강화해야 한다.”

— 한나라당의 ‘자생적 공산주의자’라 불리는 홍준표의 헛소리들

“2003년 3월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우리는 거짓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내게 야유를 퍼부었다. … 지금 부시에 대한 내 생각에 미국인 70퍼센트가 동의하고 있다.”

— 미국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직원이 즐겁게 출근길에 나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휴무도 없애가며, 일요일에도 근무하니까 월요병이 없는 것”

— ‘월요병이 없는 회사로 출근길이 즐겁다’는 뉴코아의 선전을 비웃는 노동자들

“사람 사는 세상에 참여정부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 …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 참여정부의 진보는 … 실용적 진보 … 시장 친화적인 진보 … 합리적 진보 … 민주주의의 장래는 노사모에 있다!”

— 노무현의 위선과 헛소리

“그렇다면 왜 내가 당대표로 있을 때 대연정을 하자고 그랬느냐. 너무 앞뒤가 어긋나는 말”

— ‘독재자의 딸’이라는 노무현의 공격에 발끈한 박근혜

복지 확대와 고리채 규제로 ‘쩐의 전쟁’을 막아야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쩐의 전쟁’은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 파괴, 자살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왔다. 전체 시장 규모는 40조 원(민주노동당), 적게 잡아도 18조 원(한국은행)이다. IMF 경제 위기와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10년 만에 사채업자 수가 열 배로 늘었다. 일본 대부업체까지 자국 금리 규제를 피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 무이자 과장 광고로 유명한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이 그들이다.

고리대부업자 수가 늘어난 것만 문제가 아니다. “약탈적 대출”이 진짜 문제다. 대부업법은 등록 업체의 최고 이율을 66퍼센트로 규제하지만, 미등록 업체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금융’의 연평균 이자율은 2백23퍼센트다(금융감독원 자료, 2006년 말 현재).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 인간적으로 보일 정도다.

“제도적 경제 테러”

게다가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은 지난 10년 간 재무 건전성 유지 명목으로 “부자 마케팅”은 늘린 반면 소액 예금자들은 쫓아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 저리 소액 대출을 축소해 왔다. 삼성·엘지 등 재벌이 경영하는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이자율도 40퍼센트에 가깝다.

따라서 고금리는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제도적 경제 테러”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제도 금융에서 돈줄이 막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리 사채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뉴스메이커〉가 다룬 피해 사례에서 한 50대 여성은 2003년 시부모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대부업자에게 급전 7백만 원을 빌렸다. 높은 이자 탓에 사채를 얻어서 사채를 갚다 보니, 상환



대부업 TV광고 전면 규제를 촉구하는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들

한 돈이 3천만 원이나 되는데 빚은 되레 1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빚에 쫓돌리던 남편은 자살하고 가정은 파탄났다.

보통, 사채업자에게 5백만 원을 빌리면 수수료·법정비용·선이자 등을 미리 떼고 4백만 원 가량을 받는다. 하루 이자만 3~4만 원씩 하는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대출 상환용 대출을 또 ‘요청’받는다. 이 돈에서 최초 대출 상환과 선이자 등을 또 떼고 받는다. 1천만 원 가까이 빌려도 실제 손에 쥔 돈은 절반에 불과하고, 빚은 여전히 그대로다.

채권 추심은 전통적인 조폭의 사업 영역인데, 협박과 폭력은 기본이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는다.

재경부는 대부업 이자를 규제하면 돈 구할 곳이 없는 서민들은 더 음성적인 고금리와 채권 추심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며 사실상 고리대부업을 옹호한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학자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저리의 서민 금융을 국가가 시행한다면 금리 규제가 음성적 고리채를 활성화시킬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 의원이 국가가 돈을 대고 운영하는 서민은행 설립 법안을 제출한 것은 지지할 만하다.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을 모델로 한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소액 대출) 등 민간 대안들은 자칫 운용 자금을 댈 수 있는 기업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 최근 하나은행이 3백억 원 기금을 출연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나은행 자신이 ‘러시앤캐시’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는 등 고리대부업체의 전주(錢主) 노릇을 해 왔다.

단지 생활비가 필요했던 사람들을 지옥 같은 ‘쩐의 전쟁’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려면 복지 확대와 금융에 대한 국가 관리가 필수적이다.

김문성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

대학의 시장화·돈벌이화 방안

지난 5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은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을 줄인다는 구실로, 대학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보유한 땅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놨다. 또, 대학이 백화점·할인점·영화관·스키장·유원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우리 나라 대학 재정 중 정부 지원은 15.1퍼센트로, 90퍼센트 정도 되는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45.1퍼센트), 일본(41.5퍼센트)보다도 훨씬 낮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대학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교육 재정 해결책이랍시고 대학들을 돈벌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이미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을 마구 올

리면서도 ‘건축’이나 ‘기타’ 용도로 적립금 쌓기 경쟁을 벌여 왔다.

그래서 주요 사립대학들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방안을 환영했다. 한국증권업협회도 수조 원에 이르는 대학적립금을 유치하려고 벌써부터 ‘사립대학 투자풀’(가칭) 구성에 들어갔다.

적립금

현재 사립대학들이 6조 원에 가까운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투자한 적립금에 손실이라도 생기면 등록금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들도 수조 원씩 적립금을 쌓아 펀드를 운용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펀드매니저 수십 명을 직접 고용해 2백92억 달러(약 27조 원)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금융계의 ‘큰손’인데, 이 적립금 중 5퍼센트 정도만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기금 지출을 1퍼센트만 늘려도 학생들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이 실제 적용되면 대학들의 적립금 쌓기 경쟁은 더욱 가속화하고 등록금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 내용을 평가한다며 각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미 학생들은 토익·토플 등에 목을 매야 하고 대학이 입사 준비 기관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직접 대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대학은 더욱 기업 입맛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리 되면 학생에 대한 학사 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고, 대학에서 자유로운 학문 연구의 분위기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에서 교육 개방은 제외했다며, 교육 공공성은 지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이나 ‘국립대 법인화’ 같은 ‘자발적 자유화’ 정책들로 대학을 시장에 내맡기려 한다. 이 때문에 교육 공공성이 큰 위협에 처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맞서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투쟁은 한미FTA 반대 투쟁과 연결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실패하고 있는 미군 이라크 증파

미국의 이라크 전략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조지 W 부시의 군장성들은 미군의 이라크 ‘증파’가 2008년 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이라크 주둔 미 지상군 사령관인 육군 중장 레이먼드 오디어노는 휘하 장교들이 이라크의 특정 게릴라 단체들과 휴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5월에 미군 병사 1백27명이 사망했다. 이는 2004년 말 팔루자 공세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다. 6월 1일부터 3일까지 사망한 미군 병사가 14명을 넘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미군 부대를 비교적 소규모 단위로 분산 배치한 전술 변화 때문이다. 예컨대 바그다드 광역시의 미군은 약 60개의 부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이 때문에 적의 공격에 더 취약해진 것이다.

전술 변화 초기에는 바그다드의 종파간 폭력이 감소했다. 그러나 그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예컨대 북부 도시 모술에서는 아랍계 수니파 민병대가 쿠르드족 약 7만 명을 집에서 쫓아냈다.

이제 종파간 살인이 바그다드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5월 첫 3주 동안 바그다드의 영안소에 안치된 피살자 시신은 3백21구였다. 이는 2월 14일 미군 ‘증파’가 시작되기 전인 1월 한 달 동안 바그다드 영안소에 안치된 피살자 시신과 똑같은 수치다.

〈워싱턴 포스트〉는 2월 14일 이후 14주 동안 20명 이상씩 사망한 차량폭탄 공격과 자살폭탄 공격 20건으로 적어도 1천9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 전 14주 동안 11건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8백21명이었다.

요컨대, 미국 국방부의 계획은 어그러지고 있다. 이 점은 미국 정가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부시에게 굴복했다. 그래서 전비 지원 법안과 미군 철수 시한을 연동시키던 입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부시의 동료인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적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몇 주 전에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이 백악관에서 부시를 만나 미군 ‘증파’에 대한 자신들과 유권자들의 인내심이 바닥

을 드러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자 람 에마뉴엘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부시와 공화당의 갈등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지 W 부시는 2009년 1월 20일 백악관 문을 나설 때 ‘이라크’라는 도장이 찍힌 상자를 차기 대통령에게 물려주는데 혈안이 돼 있다. 공화당은 차기 선거에서 이라크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데이빗 퍼트레이어스는 오는 9월까지 ‘증파’의 성공여부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증파’를 성공시킬 강력한 계획을 짜내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최근 〈뉴욕타임스〉는 그들 발명의 정치적 기반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야기들을 실었다.

첫째 이야기는 부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내년에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부대의 규모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논

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미군 병사들이 미국의 꼭두각사인 이라크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조언하고 있으므로 주둔군 전체 규모는 14만 6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한국 모델’

이 정책은 ‘증파’를 끝장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을 확인시켜 주는 보도가 지난 6월 3일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그 기사는 부시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한국 모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중국과의 전쟁이 끝난 1953년 휴전 이후 남한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켰다.

‘한국 모델’ 계획은 “이라크에 서너 개의 대규모 군사 기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지들은 모두 도시 — 사상자가 급증하고 인구도 많은 —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안바르 주(州)

5월 25일 이라크 제2의 도시 바스라에서 도로 매설 폭탄 공격으로 파괴된 차량

의 알 아사드 기지, 바그다드 북쪽으로 약 80킬로미터 떨어진 발라드 공군기지, 남부의 탈릴 공군기지 등이 그런 기지에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2004년과 2005년에 추구한 전략의 변형이다. 당시 미국은 미군을 도시에서 빼내고 꼭두각시 이라크 군대와 종파적 암살단들에 의존해 치안을 유지하려 했다. 이 방법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자 그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증파’였다.

그리고 이제 ‘증파’도 실패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점차 작아지는 이라크라는 원 안에서 움직이면서, 미국의 대다수 정치 엘리트들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듯한 패배를 늦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의 유럽학 교수이고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 많은 책을 썼다.

》1면에서 이어짐

또, 키르쿠크를 통제하려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시도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우려하는 터키의 군사 개입 위험마저 부르고 있다. 심지어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터키에게 이라크(쿠르드 지역)를 침공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할 지경이다.

쿠르드 자치정부도 확보한 채굴권을 다국적기업들에게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의 석유회사 DNO가 쿠르드 지역과 터키 접경 근처에서 채굴을 시작했다. 이미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직후에 터키의 Petoil, Genel Enerji, 최근에는 캐나다의 Western Oil Sands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개발 참여는 이라크 내의 반목과 폭력을 부

추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그러한 반목과 폭력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즉,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수탈 참가가 분명해지는 순간 한국과 자이툰 부대는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점령과 학살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피 묻은 떡고물을 챙기려는 생각 자체가 끔찍한 리만쿰 야비한 탐욕이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은 이라크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쿠르드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주한미군

한편, 부시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미

하원에서 철군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1천억 달러의 추가 전비 사용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는 부시에게 일종의 청신호였다. 그래서 부시는 9월에 추가 전비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 장기 주둔에 관한 언급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 장기 주둔 정책의 가장 최근 버전은 “한국 모델”이다. 부시는 “북한과 남한의 휴전 이후에 54년 동안 남한에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켰던 것처럼 미군이 이라크 지역에 계속 주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뉴욕 타임스〉6월 3일치)

한국 진보 운동은 주한미군 주둔뿐 아니라 이를 모델 삼아 이라크에서도 장기 주둔을 획책하는 부시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해 적극 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진보 운동은 지금 한미FTA 체결

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 투쟁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부시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투쟁도 중요해졌다. 반전 운동은 한미 FTA 체결 당사자인 부시와 노무현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낼 수 있다.

이미 3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은 상반기 한국 정세의 돌파구를 여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바 있다. 최근 제기되는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투쟁도 6월 말 한미FTA 체결 저지 투쟁에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반전 운동은 연말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와 그 후신들, 우익 호전 세력인 한나라당 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계획하고 있는 6월 10일 긴급 반전 집회로 결집하자.

김광일

여권과 우파 야당 - 두 '악'들의 꿀불건 아귀다툼

노무현은 최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진실과 양심을 '위반'한 말들을 쏟아냈다. '노빠'가 아니면 참고 듣기 힘든 자화자찬도 많았다. 노무현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들먹이며 자신의 정부가 "합리적 진보"라고 우겼다.

그러나 국민의 눈·귀·입을 막고 집회 등 민주적 자유권을 억압하면서까지 시장주의에 따른 한미FTA를 강행하는 것이 "진보"인가?

부시의 학살 도우미로 이라크 파병을 해놓고 다시 '석유채굴권'을 들먹이며 파병을 연장하려는 것이 "평화"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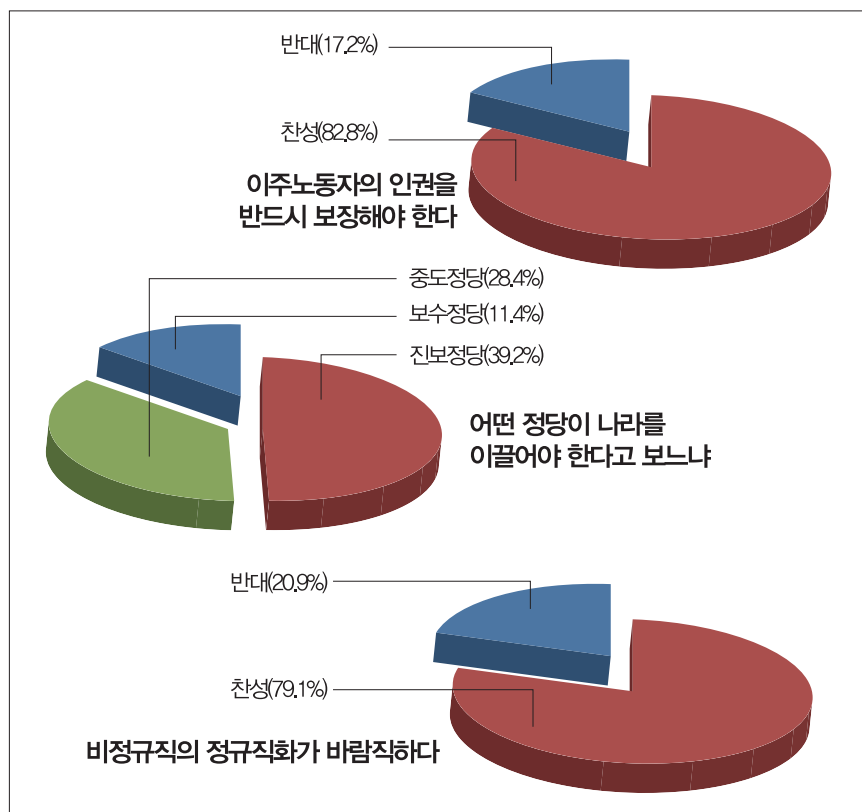
이시우 사진작가의 작품을 국가보안법의 칼로 난도질하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과 서구라면 아무 문제 없이 대학교재로 쓰일 도서의 판매자를 탄압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인가?

노무현은 "민주주의는 시장친화적인 사회"이고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략"이라고 솔직하게 주장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시장친화적 사회'를 위해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짓밟아 온 폭력적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부일 뿐이다. 이 위선 덩어리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증오는 뿌리깊다.

그래서 전 대통령 김대중까지 적극 훈수를 두며 나섰지만 민주당 박상천은 "열 우당 아류나 이중대로 인식되면 망하는 길, 동반자살의 길"이라며 '대통합'을 꺼렸다.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일단 '소통합'에 성공했지만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의 범위·시기·주도권을 둘러싼 '범여권'의 사분오열은 계속될 것이다.

'범여권'이 여전히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오줌물 싫다고 똥물 먹겠느냐'는 협박뿐이다. 이번에도 노무현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끔찍하다"고 했다.

물론 친미·친재벌·부패·우익 한나



두 '악'과 다른 대안을 염원하는 대중 정서를 보여주는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이명박의 '경부운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박근혜의 '열차 페리', 홍준표의 '1인1주택' 등 포퓰리즘적 사기극에 가려져 있지만 한나라당은 노무현 못지 않은 신자유주의자들이다.

이 점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자"는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명박도 "투기 목적이라도 자기 집을 자기가 옮기는 건 자유"라며 기업주와 투기꾼에 대한 규제를 죄다 반대했다.

노무현이 "가장 넉넉한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사람은 1퍼센트 대통령"이라고 하자 제발 저리듯 반발한 것도 이명박과 박근혜다. 물론 노무현 자신도 '넉넉한 사람들'을 위해 법인세를 깎고,

종부세를 '종합구멍세'로 만든 '1퍼센트 대통령'이다.

"교수가 무슨 노조냐"는 이명박과 "강성노조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박근혜는 모두 대처리즘의 추종자들이다.

오줌물과 똥물

한나라당의 후보 경선과 '검증'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추악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떡값검사' 안강민이 검증위원장이고 횡령 혐의로 고발된 인명진이 검증위원인 것부터 코미디인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질세라 비리 전력자들을 영입하고 있다. 대선자금 비리 주역 서청원, 공천헌금 사건의 김덕룡, 전두환 비자금 사건의 사공일 등이 그들이다.

'5백50킬로미터에 달하는 경부운하를 골재를 팔아서 건설 비용을 충당하며, 4년 만에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이명박의 "태권브이 수준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박근혜측 유승민)는 당내 경쟁자들조차 조롱하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반노무현 반사이익 덕분이다. 이처럼 서로 상대방의 추악함에서 존재의 근거를 찾는 자들이 이 문제 저 문제로 다투는 꼴은 눈뜨고 봐주기 힘들만큼 역겹다.

노무현은 조중동이 "기사를 담합하고 진실을 왜곡한다"고 비난하고, 조중동은 노무현이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말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이 "안전하다"고, 비정규직 악법이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라고, 한미FTA가 "국익을 위한 잘한 협상"이라고 '기사 담합을 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말살'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 '삼각동맹'이었다.

최근 <한겨레>의 '국민 이념 성향 조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진보와 개혁을 염원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무려 80퍼센트의 국민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지지했다. 특히 20대와 대학생의 진보적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번에 노무현은 "설거지 대통령"을 자처하며 "묵은 과제"인 온갖 개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미FTA 체결, 이라크 파병 연장과 레바논 파병, 비정규직 악법 시행 등을 '설거지'하는 데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은 언제 싸웠냐는 듯 협력할 것이다.

진보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광범한 대중과 청년들 속으로 파고들어가 이러한 개악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을 건설하며 진보적 정치·선거 대안을 건설하자.

전지운

국립대 법인화 반대 운동과 한국대학생 대회

지난 6월 2일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7천여 명이 참가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전국대학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 본부의 교직원 노동자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대학 학생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하루 전에 8천여 명이 모인 전국예비교사 총궐기에 이어 이날 법인화 저지 투쟁에도 많이 참가했다.

류진준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립대법인화는 총장직 선제 같은 대학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재정 지원이 줄게 돼 등록금이 대폭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학의 주체들이 힘을 모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해 싸우자"고 호소했다. 김철홍 전국교수노동조합 국공립대 위원장은 "법인화법이 통과된 울산과학기술대의 교수들은 계약직으로 고용될 것"이라며 국립대법인화가 대학 구성원들의 처우를 더 악화시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법인화가 대학 캠퍼스 내에 쇼핑몰을 건설하는 등의 대학 상업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법인화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정부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

인화법이 통과된 울산과학기술대나 법안 통과를 추진중인 인천대처럼 개별법 형태로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류진준 상임회장이 말했듯이 "오늘 집회의 열기를 대학으로 가져가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차원의 법인화 저지 '공투위'를 더 실질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주말 학생 수천 명이 서울 도심에 누비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정치 행동을 벌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6월 1일에는 교대·사범대 학생 8천여 명이 모여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고, 6월 2일에는 국립대법인화 저지,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학생 수천 명이 참가했다.

2일과 3일 연이틀 열린 한국대학생대회에도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한미FTA와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였다.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투쟁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구실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정치적 대안 건설과 연결돼야 한다.

이상우

유럽 대중의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지난 6월 1~2일 독일 로스탁에서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거의 8만 명이 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 시위를 위해 노동조합, 빈곤 활동가, 교회, NGO 등을 총망라하는 광범한 공동전선이 결성됐다. 또, 유럽 전역에서 G8 정상회담과 이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거 로스탁으로 몰려들었다. 대규모 시위는 최근 유럽 대중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주류 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잘 보여 줬다.

G8 반대 행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G8 정부가 기후변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깨달음이 광범하게 퍼져 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 최근 부시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그의 형편없는 대안을 보고 사람들은 더 분노했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부시를 비판했지만 자신도 G8이 기후변화에 관한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빈곤 문제에서는 2005년 G8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쥐꼬리만 한 지원도 아프리카의 빈곤들에 제공되지 않은 것이 대중적 공분을 샀다.

둘째, 독일 대중의 의식이 급진화하고 있다.

독일인 77퍼센트가 3주 이상 진행중인 도이치텔레콤 파업을 지지한다. 도이치텔레콤 파업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독일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며 대중의 반신자유주의의 정서가 이

파업을 매개로 표현되고 있다.

최근 연립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토네이도 폭격기를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엄청난 대중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도 한몫했다.

분노

독일 대중 의식의 급진화는 신생 정당인 ‘좌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좌파’는 선거대안(WASG)과 민사당(PDS)의 합당으로 탄생한 정당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좌파’의 지지율은 기민련/기사련, 사민당에 이어 3위(12퍼센트)를 기록

하고 있고, 사민당원의 9퍼센트는 ‘좌파’로 당적을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런 급진화가 반G8 시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경찰은 반G8 활동가 21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잡아들이고 활동가들의 편지와 이메일을 검열했다. 이런 누명 씌우기와 검열은 옛 동독 비밀경찰의 방법을 본딴 것인데, 오히려 대중의 반발을 샀다.

경찰이 회담장을 철조망으로 에워싸고 해외 활동가들의 독일 입국을 방해한 것도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웠을 뿐이다.

주류 언론이 크게 부각시킨 시위대 일부의 ‘폭력’은 경찰이 조장한 이런 공포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독일 정부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G8 정상회담이 끝나는 8일까지 반대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6월 6일 조지 부시를 포함한 제국주의 살인마·강도들이 로스탁에 도착하면 또 다른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다.

또, 3일부터 로스탁 곳곳에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기치 아래 반신자유주의·반전 운동의 대안을 둘러싼 토론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토론들은 현실의 반자본주의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김용욱

이집트 민주화 인사 석방과 민간인 군사재판 반대 기자회견

“무바라크 독재 정권의 끝이 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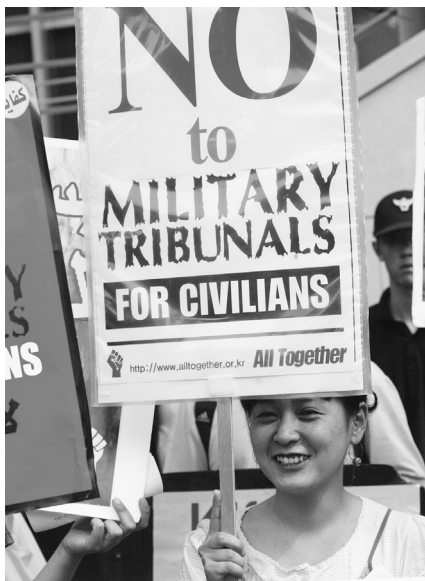
최근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는 야당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주의 야당인 알가드당 대표 아이만 누르 박사를 투옥했고, 특히 하원에 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최대 야당인 무슬림형제단을 집중적으로 탄압했다. 현재 무슬림형제단 활동가 2백20여 명이 구금돼 있고, 이중 40여 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5월 초 이집트 민간 법정 판사가 민간인 군사재판 회부를 불법이라고 판정했음에도 무바라크 정부는 무슬림형제단 간부에 대한 군사재판을 강행하려 한다.

이집트 운동은 이런 탄압에 맞서고 있다. 6월 2일 이집트 카이로 시내 변호사회관 앞에서 다양한 단체 소속 활동가들 2백50여 명이 민간인 군사재판 회부와 야당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 이집트 민주화 운동인 키파야 운동은 다음 달 상원 선거를 보이콧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이집트 운동의 저항에 호응해 한국에서도 6월 4일 ‘민주화 인사 석방과 민간인 군



“민간인 군사법정 회부 반대한다”

사재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여 개의 단체들이 이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고, 40여 명이 참가했다.

첫 발언에서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

원은 “지난 3월 말 카이로 국제평화회의에 참가해서 많은 이집트 민주화 활동가들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무바라크 독재 정권의 말로가 멀지 않았음을 느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오랜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며 다른 나라의 민주화 투사들에게 계속 연대를 보낼 것이다” 하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이집트 키파야 활동가이자 저명한 블로거인 호썸 알-하말라위가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분과 우리는 부패한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같은 적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과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승리일 것입니다. … 우리는 어떤 정부의 도움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여러분 같은 평범한 시민·진보정당·시민사회 단체의 지지를 바랍니다. 계속 함께 싸웁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민간인 군사재판 회부의 부당성을 폭로했다. “왜 민간인을 군사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되는가? 과거 민청학련이나 민혁명 사건을

생각해 보자. 1차·2차 재판에서 사형 집행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재판이 군사 작전처럼 진행됐다.”

〈맞붙〉기자 김용욱은 “지금 이집트에는 역동적 민주화 운동과 농민의 생존권 투쟁이 존재하며, 다른 무엇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무바라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들 운동이 서로 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야당 인사를 탄압해서 사람들을 겁주려 한다. 그러나 이집트 민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이집트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대사관은 기자회견문 접수조차 거부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결의를 다졌다. 중동에서 이집트가 차지하는 정치적 위치를 볼 때 이집트 운동을 지원하는 국제 연대 활동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

김용욱



최일봉 '다함께' 국제연락간사

6월 항쟁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원인과 배경으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첫째 원인은 두루 알다시피 정치적 억압이 너무도 혹심하고 야만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권은 광주학살로 집권한 정권이라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어요. 정치적 억압의 극치가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씨 고문 살인 은폐·조작, 6·10 항쟁 전날 이한열 씨가 최루탄에 맞아 사경에 빠진 일들이죠. 둘째, 당시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1987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9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사회가 불평등하고 소득격차가 심하다고 답변했어요. 셋째, 부패와 비리가 극심했어요. 이철희·장영자 사기 어음 사건, 명성 사건 등 엄청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첫째, '3저 호황'이라는 굉장한 경제 호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감이 많았습니다. 둘째,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 전환, 국가통제 자본주의에서 요즘말로 신자유주의로 전환이 세계적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1960년대 말 서구의 68항쟁도 그런 배경이 있었고, 한국보다 몇 년 늦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동유럽의 변화도 그런 배경 아래 벌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국가 경제력 강화를 위해 경제를 다국적화해야 한다는 필요, 그걸 통해 경제 전반을 고도기술 경제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지배계급 안에서 개혁 필요성을 느끼는 분파들이 있었던 거죠. 6월 항쟁은 전반적 경제 구조조정과 지배계급 내의 분파 투쟁 격화 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1986년에는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가 민중항쟁으로 물러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당시 활동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또, 이것이 미국의 지배 전략에 미친 효과는 무엇입니까?

1986년 2월 필리핀 '피플 파워' 혁명은 단지 좌파만이 아니라 민중 전체에게 말할 나위 없이 고무적인 충격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여기도 끝장이야', '전두환은 마르코스보다 더 불행한 운명을 맞이 않으면 오히려 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며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반대로 전두환은 공포에 떨었고 이 때문에 오히려 탄압을 강화하려고 했죠.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입장은 필리핀에서 좌충우돌했어요. 최후 순간까지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반복하려 했고, 레이건은 기자들 질문에 막 신경질내고 그랬거든요. 필리핀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기회주의적인 입장으로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노골적이고 일방적인 독재 정권 지지 입장이었는데,

필리핀을 겪고 나서는 친미의 범위 안에서라면 뭘 성싶은 자들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약간 바뀐 것이죠. 이 게 효과를 보게 된 것은 이후 1987년 6월 한국 상황에서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군대를 투입하려 하자 미국은 '제2의 필리핀 꼴 난다' 해서 그걸 막게 됩니다.

6월 10일 이후 항쟁의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는데 당시 분위기를 전해 주시죠.

1985년 하반기는 '유화국면'이 끝나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상당한 자신감과 전투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1987년 박종철 사건이 났을 때도 사람들은 격분과 동시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2월 초 서울대에서는 정부가 탄압했는데도 고문 치사 은폐·조작에 항의하는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추모제에 참가해 함께 행진했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6월 10일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정권을 타도할 수 있다'는 낙관이 있었죠. 적어도 선진 부문에서는 이 점이 분명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 학생 투사들도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유연한 전술을 구사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국민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전정들이 비무장 학생들을 두들겨 패면 거리의 시민들이 전경한테 달려들어 샷대질 하면서 야단을 치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지지가 많았습니다.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6월 항쟁이 학생과 이른바 중산층의 투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7월에 시작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는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에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항쟁에서 노동자들이 한 구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사무직 노동자들이나 상인들을 뜻하는데, 소위 중산층이 6월 항쟁에 가세한 것은 6월 항쟁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이 주도 세력은 아니었죠. 사무직 노동자들과 영세 상인들은 나중에 합세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대중운동이 엄청 강력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항쟁 초기부터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등 평범한 노동자들이 거리 시위에 많이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직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점은 지방 도시에서 더 분명했어요. 성남·안양에서 그랬죠. 부산에서도 처음부터 사상공단·사하공단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죠. 당시 저는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어 안양으로 집결하곤 했는데, 안양에는 전문 대가 하나 있는 정도라 [소수 학생을 뺀] 나머지 전부 다 안양이나 군포의 노동계급이었어요. 따라서 '중산층 중심'이라는 말은 많이 과장돼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도 하고요.

학생과 중산층이 7월~9월 노동자 파업을 의면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준비가 안 돼서 그랬어요. 학생들은 당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민족민주 혁명' 등 모종의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했지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탈린주의의 유산 때문에 1980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다. 당시 항쟁에 참가한 최일봉 동지(다함께 국제연락간사)에게서 항쟁의 생생한 전개 과정과 제기되는 논점들을 들어 본다. 당시 최일봉 동지는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군포의 한 민중교회 노동야학 활동을 하면서 분신 택시 노동자 박종만 열사 추모사업회 활동을 지지했고 사회주의 씨름 활동도 하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아쉽게도 많은 내용을 축약할 수밖에 없었다. 축약되지 않은 인터뷰 전문은 <빛날>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년대 새로운 좌파 사상을 재발견해서 흡수했던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토록 대규모로 일어서리라는 것을 예상도 못했고 당황했다고 말할 수 있죠. 상인들이 노동자 투쟁을 외면했다는 것은 그들의 계급 성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노동운동이 조직적으로 강력해져야만 노동자 쪽에 호의적이게 될 테니까요. 사무직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기본권 문제에서는 상당히 선진적이었지만 계급의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8월 말 9월 초 들어서서 그들 자신이 파업을 하고 노조를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중산층의 외면'이란 말도 과장돼 있다고 할 수 있죠.

6월 항쟁은 사회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적 투쟁이었어요. 단지 학생, 소위 중산층,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다계급적인, 그야말로 독재정권의 학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지지했을 정도였죠. 전두환 정권이 군대 투입을 고려했지만 미국이 그것을 막았는데 그때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참여였죠.

노동자들은 거리 투쟁에서 축제 분위기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죠. 막강한 국가권력 앞에 사용자들도 절절매던 시대였는데, 그 국가권력이 후퇴하니까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얻어 사용자들에 맞서 싸울 수 있던 거죠.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정치 투쟁과 경제투쟁의 상승적 상호작용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은 어떤 세력이 주도했고 그들의 정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오늘날 한미FTA저지 범국민과 비교해 본다면요?

당시 국본은 명백히 김영삼과 김대중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리고 민통련이 있었죠. 말하자면 주축 세력이 자유주의적 야당과 좌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계급적 성격에서도 모종의 인민전선 성격이 분명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그것을 거부한 채 싸운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고립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본에 참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미FTA 저지 범국민과 비교하면, 범국민에는 두드러진 자본가 세력이 참가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좌파 세력이 더 주도적이고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 점은 제국주의 문제에도 반영됩니다. 당시 야당은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 강했죠. 당시 국본 내에서는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자유주의 야당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국본 내 좌파도 제국주의 문제에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 오늘날의 범국민은 제국주의 문제도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있죠.

당시 자유주의 야당이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대중에게 분노의 초점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종종 투쟁을 억제하려는 시도도 했던 것 같은데 야당이 민주화 투쟁에서 했던 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좌파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했을까요?

후자부터 답변을 하죠. 당시 좌파는 NL과

CA가 있었습니다. CA는 자유주의 야당을 '주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많이 할애했어요. '정치적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술적 제후라는 점은 완전히 실종돼 유연성이 없었죠. 나중에 전두환 회고록 같은 게 공개됐는데, 전두환이 '자민투[NL]가 유연한 것 같지만 그들이 당면한 적이다. 민민투[CA]는 야당 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들이 직접 [권력을] 잡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권 입장에서선 당면한 적이 자유주의 야당과 동맹하고 있는 주류 좌파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암묵적으로 전술적 제후를 거의 원칙 수준으로 격상시켰어요. 인민전선론이었던 거죠. 따라서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으로 넘어갑니다. 6월 항쟁 직전까지는 야당이 대중운동을 억압하거나 해체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중운동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반정부 분위기는 강력했지만 그것이 6월 돼서야 대중운동이 됐으니까요. [항쟁이 시작되자] 야당은 운동을 은근슬쩍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려 했는데, 그게 직선제였어요. 사실 운동의 구호 자체는 분명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민주 쟁취' 이런 거였거든요. [운동 차원에서는] 직선제 요구가 기조로나 요구로나 명확하게 정식화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좌파 세력은 자신들이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

죠. 물론 일부는 명확하게 그것을 구호로 외치기도 했어요. '직선제로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것은 국본 안에서 정식화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야당이 원하는 대로 맞춰진 거죠.

야당이 운동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려는 모습이 분명해진 때가 6월 18일~19일 군대 투입 얘기가 흥흥하게 나돌 때입니다. 그때 미국이 군대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개입했습니다. 군 투입이 오히려 더 큰 사태로 발전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야당은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야당이 아래로부터 운동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통제하려 했던 때는 노동자 대투쟁이 고양된 8월 중순이었습니다. 이 때는 정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반노동자 연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자유주의 야당의 계급적 본질은 오히려 6월 항쟁 이후 계급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6·29 선언 이후 김대중과 김영삼은 따로 대선에 출마했고 결과적으로 노태우가 당선했습니다. 당시 좌파들의 대선 전술은 어땠습니까?

두 김 씨가 각각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너무 뻔한 예측이었어요. 군사 정권이 6·29 선언으로 양보했을 때 이 점도 계산에 있었거든요.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다른 지역 자본가들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이었다는 점이 이들의 독자 출마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였죠.

운동 쪽에서는 이들에게 단일화하라고 압력을 넣을 필요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자본가 세력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두 김 씨가 단결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폭로하고, 설사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안 돼도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다. 운동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게 필요했죠. 대선에서 자유주의 세력으로 군부를 패퇴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한 생각이자 선거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김 씨가 대선에 따로 나가는 게 확정됐을 때, 운동의 대부분과 노동계급의 더 큰 부분이 김대중을 지지하니만큼 사회주의자들은 김대중에 비판적 투표를 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비판적 지지'라는 말과 달리 갈수록 '무비판적 지지'였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87년 항쟁 이후 '개혁 정부'들의 등장과 개혁 실패,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공세 때문에 더는 '87년 체제'가 의미 없다는 주장이 많아졌습니다.

'87년 체제'가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상부구조만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1987년 항쟁은 1945년 이래 남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항쟁을 계기로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계급의 조직, 노조 같은 일상 조직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치 조직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자유권이 신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의 많은 변화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자본가들이

점점 보수화하기 시작한 점, 문화적 개방도 시작한 점 등 모든 변화들이 1987년을 전환점으로 합니다. 따라서 '87년 체제'의 종말을 일면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관점에 서 있지 않은 결론 보여요.

'87년 체제'의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1997년 IMF 위기를 기점으로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데 이는 일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군사 정권도 상당히 시장주의적이었거든요. 일관된 신자유주의가 아닌 국가통제가 강하게 결합된 시장주의였지만 말이지요. 전두환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은행들을 통폐합하고 민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 개방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1997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야 신자유주의로 전환됐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노무현 자신도 6월 항쟁의 정통성을 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20년 전의 항쟁에서 배워야 할 교훈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6월 항쟁은 여러 계급들이 민주라든가 평등, 자유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도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이었어요. 그런 투쟁은 승리한 뒤 분화를 겪기 마련이에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낡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주주의 문제도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새로운 과제, 즉 계급투쟁이 더 중요해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뜻하는 바는 6월 투쟁으로 몽췌던 세력들이 갈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중 가장 온건한 세력이 먼저 배신하는 거고, 김영삼이 3당 야합을 한 게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노무현도 그런 맥락이죠. 그가 6월 항쟁의 일부분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주체인 양 말하는 것은 당치도 않아요. 자유주의 야당이 결코 주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6월 항쟁은 거리 전투가 주된 형태였다고 하면 거리 전투를 조직하고 주도한 것이 청년 학생들 아닙니까? 또, 참가자 수준에서 보면 노동자 대중이 가장 주된 세력이었죠. [게다가] 6월 항쟁의 이상, 민주주의로 집약됐던 급진적 이상들에 비춰 보자면 노무현은 배신자죠.

일부 노동자주의자들은 6월 항쟁보다는 7~9월 노동자 투쟁만 보는데 이는 잘못 보는 겁니다. 마치 6월 항쟁만 얘기하고 노동자 투쟁은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반대지만 거울 이미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명백한 연속성이 있거든요. 노동계급 대중이 미조직 개인들로, 군중으로서 정치투쟁에 참가한 것이죠. 다시 말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 작용이라는 것이 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묶어 주고 6월과 7~9월을 이어주는 이상은 단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만이 아닙니다. 아주 발본적인 의미의 민주주의,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해방이라는 이상이 우리를 묶어 주었거든요. 이런 이상은 오늘날 피억압자들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대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진보·진출이라는 점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6월 항쟁은 우리의 항쟁이고 연속된 7~8월 항쟁과 묶어서 우리의 전통, 우리의 대의,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기억, 계급의 기억입니다.

인터뷰 · 정리 한규한

외세의 개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수현

지난 5월 29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수단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 이후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투로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백만 명 이상이 비참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르푸르의 인도주의적 비극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유엔)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이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지난 4월 말 영국 런던에서는 수단 제재 강화와 유엔의 개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졌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의 개입은 결코 다르푸르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먼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 국가다. 그리고 유엔에서 다르푸르 사태 개입을 결정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미국 못지 않은 학살자들이다. 프랑스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의 전쟁과 학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장본인이고, 영국 내무부는 다르푸르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영국에서 쫓아내려 애를 썼다.

소말리아

중국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소수민족의 독립 운동을 무력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패권을 추구하며 막대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러시아도 수많은 체첸인들을 학살하며

체첸 독립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제국주의 살인마들에게 다르푸르의 비극을 막을 “인도주의적 군대”를 조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살인을 막기 위해 살인자들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1992년 유엔은 소말리아의 기근을 끝내고 소말리아인들을 군벌의 압제에서 구한다는 구실로 소말리아에 개입했다. 그러나 미국·캐나다·벨기에 점령군의 갖가지 만행으로 소말리아인 1만 명이 죽거나 다

쳤고, 이에 분노한 소말리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결국 점령군을 쫓아냈다. 소말리아 군벌들의 힘은 오히려 강화됐다.

만약 지금 제국주의 열강들이 “평화유지”군을 다르푸르에 파병한다면 파병군은 교전중인 어느 한 쪽을 편들게 될 것이다. 지난해 5월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의 여러 반군 중 하나와 평화협정을 체결했을 때 부시는 이를 환영하면서,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부시의 편이었던 그 반군이 그 뒤 다르푸르 북부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반군 부족을 “청소”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그 반군이 수단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잔자위드’[“말을 탄 무사들”이라는 뜻] 민병대와 똑같이 약탈·강간·살인 전술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다르푸르 개입은 해결책이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자원·패권 쟁탈전

다르푸르의 고통과 비극은 석유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주요 자원 쟁탈전과 패권 다툼이라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1978년 미국계 석유 다국적기업 셰브런이 수단 남부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고 개발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내전 와중에 직원들이 반군에게 살해당하자 셰브런은 수단에서 철수했다. 당시 미국은 억압적인 수단 군사 정부를 지지했다. 냉전의 경쟁자였던 옛 소련이 남부의 반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냉전이 끝난 1991년 수단의 이슬람주의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지 않자 미국은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하고, 과거의 적(敵)인 남부 반군 수단인민해방군(SPLA)을 지원했다.

수단의 이슬람주의 정부는 1996년 오사마 빈-라덴을 축출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지만 클린턴 정부는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폭파에 대한 보복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수단의 제약공장을 미사일로 폭격

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었다. 중국은 수단과 원유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채굴권의 지분 40퍼센트를 확보했다. 또,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수단 경제에 깊숙이 개입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미국도 조심스레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수단 정부도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었

다. 1999년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는 수단 정부의 제2인자이자 이슬람주의의 핵심 이데올로그인 하산 알-투라비를 축출했다. 그리고 9·11 사건이 터지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그 대가로 부시 정부는 수단에 대한 국제 금융 규제를 해제했다.(테러지원국 지정 자체는 해제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의 직접투자는 여전히 금지됐다.) 또, 남부 반군 지도

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2005년 1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평화협정은 오히려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가 양보하는 것을 본 다르푸르 반군들이 요구 수준을 더 높였기 때문이다.

수단의 유전 사업에 복귀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다르푸르 분쟁으로 계속 차질을 빚었다.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져 전보다 약해졌음을 감지한 수단 정부가 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고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미국의 심기를 거슬렀다. 그래서 부시는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구실로 수단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만약 수단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맞은편에 또 하나의 친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고, 그리 되면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등 수단 접경국들과 함께 친미 정권 블록이 형성되는 셈이다. 이미 미국 국무부는 바시르 정권 몰락 이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작성해 놓았다.

다르푸르 위기의 원인과 대안

다르푸르 분쟁의 기원은 1970년대 이후 경제 위기와 오랜 가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초 세계 경제 위기가 수단을 강타했다. 외채가 엄청나게 늘어 정부 지출의 절반이 외채 상환에 쓰일 정도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78~88년에 수단의 파운드 화를 무려 여섯 번이나 평가 절하했다. 수단의 1인당 GDP는 1978년 4백68달러에서 1984년 2백88달러로 급락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아 이들이 굶어죽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다르푸르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그 전까지 다르푸르의 아랍계 유목민들과 푸르족 흑인 농민들은 상호보완적인 경제를 이룬 채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아랍계 유목민들은 사하라 사막 남쪽 초원 지대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푸르족 농민들의 곡식을 사고, 푸르족이 만든 제품들을 사서 시장에 내다팔고, 추수가 끝난 그루터기의 풀을 낙타에게 먹일 수 있었다. (다르푸르는 ‘푸르족의 집’이라는 뜻이다)

가뭄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가뭄과 사막화 때문에 물과 농경지가 부족해지자 푸르족 농민들은 유목민들의 이동로를 폐쇄했고, 유목민들은 초원 지대를 찾아 더 멀리 남쪽으로 가야만 했다. 유목민들과 농민들의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의 절박한 위기를 외면하고 무시하자 대중의 분노가 쌓였다.

하지만 수단의 중앙 정부가 처음부터 아랍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1989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바시르와 투라비는 처음에는 다르푸르의 아랍인들을 편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다르푸르 주민들은 아랍계 유목민이든 흑인 농민들이든 모두 무슬림이다.

수단 중앙 정부에서 아랍 우월주의 이데올로기가 득세하게 된 것은 1999년에 아랍계인 바시르가 이슬람주의자인 투라비를 축출한 뒤였다. 투라비가 쫓겨났을 때 다르푸르의 많은 비(非)아랍계 무슬림들은 투라비를 편들며 정의평등운동(JEM)을 결성했다.

무슬림

더 큰 반군 단체인 수단해방군(SLA)은 아랍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자신들의 투쟁을 남부의 기독교도-다신교도의 투쟁과 연결시키기 위해 아프리카 정체성 노선(모종의 흑인 민족주의)을 채택했다. SLA의 핵심 세력은 남부의 수단인민해방군(SPLA) □ 미국의 지원을 받는 □ 에게 군사 훈련을 받은 다르푸르인 1천5백 명이다.

이들은 케냐와 우간다뿐 아니라 차드와 에리트레아의 원조도 받는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동맹이다.

이 반군들이 2003년 2월 정부 시설들을 공격하며 다르푸르 분쟁의 포문을 열었다. 정부는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를 앞세워 반군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양쪽 모두 인종 청소를 저질렀다.

다르푸르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수단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들을 모두 지지하면서, 미국이나 유엔의 개입이 아니라 수단의 외채 탕감, 수단 난민의 미국이나 유럽 이주 허용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 수단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실행되게 만들려면 제국주의와 동맹이 아니라 대결을 추구해야 한다.

신디 시한과 미국 반전 운동



2006년 11월 평택을 방문해 미군을 규탄했던 신디 시한

양당 체제에서 벗어난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민주당은 부시의 이라크 전비 법안을 지지함으로써 수많은 미국인들의 염원을 배신했다.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과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 3분의 2가 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지 속에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미국 지배계급의 충실한 일원임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의 배신은 반전 운동 진영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친(親)민주당 성향인 ‘무브온’의 엘리 파리세르도 ‘무브온’이 “전쟁 종식에서 도망쳐 더 큰 혼란과 더 많은 군대를 위해 투표한” 민주당에 반대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배신에 대한 가장 통렬하고 호소력 있는 비판은 ‘반전 엄마’ 신디 시한의 몫이었다. 시한은 의회에서 전비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 편지’를 썼다.

“이라크 전쟁은 조지 부시의 전쟁이었다. 당신들[민주당]은 그것을 명예롭게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이라크 전쟁은 당신들의 전쟁이 됐다. …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배신했다.”

시한의 편지는 일부 민주당 지지 성향 블로거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뒤 크게 상심한 시한은 자신이 반전 운동의 “얼굴” 구실을 그만 둘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그녀는 또 조지 부시의 텍사스 목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평화 캠프를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은 자신이 “투쟁을 조지 부시와 공화당에 제한”하는 동안 자신을 추켜세웠던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자신에게 퍼붓고 있는 비난을 강조해 지적했다. “내가 공화당에 적용했던 것

과 똑같은 잣대를 민주당에 들이대기 시작하자 나의 대의에 대한 지지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헛되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도달한 가장 쓰라린 결론이라며 비통해 했다.

배신

신디 시한의 글에는 자식의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지치고 상처받고 낙담한 어머니의 심경이 절절히 드러나 있다. 시한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반전 운동의 대의에 공감하도록 하는 데 커다란 구실을 했고, 따라서 그녀의 결정은 미국 반전 운동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시한의 결정은 민주당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반전 정서는 물론 반전 운동의 잠재력 또한 여전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아쉽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부시의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명 중 2명은 부시의 “증파”가 아무 효과 없었거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인의 거의 3분의 2가 내년 안에 미군이 철군하길 바란다.

바로 이러한 광범한 반전 정서 때문에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바락 오바마는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전비 법안에 반대해야 했다. 심지어 민주당의 기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굴복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앞길이 밝은 것은 아니다. 공화당의 일부 지도자들조차 부시가 9월에 이라크 상황의 진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는 미군 철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대중의 급진화는 전쟁 문제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지난 3월 26일 칼럼에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렇게 지적했다.

“여론은 보편적 의료보험 체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매우 강력하게 선화한 듯하다. ‘캘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퍼센트가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2000년에는 이 수치가 59퍼센트였다.

또, 여론조사기관인 ‘퓨’에 따르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에 공감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최근 급격히 늘었다. 소득격차 심화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신디 시한이 이라크 전비 법안 통과 직후 쓴 ‘공개 편지’는 민주당의 배신에 대한 폭로뿐 아니라 이러한 대중의 급진화와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연결하기 위한 진취적 제안을 담고 있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옥죄고 있는 전쟁 체제에 매수돼 그로부터 돈을 받는 ‘양당 체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월 4일 활동가 회의를 열자고 호소한 것이다.

신디 시한이 정치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금 이 제안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미국 진보 운동의 일대 진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신디 시한의 영웅적 반전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바라건대) 신디 시한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가 이룬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미국은 물론 국제 반전 운동의 과제다.

김용민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전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퀴어문화축제 참가기

6월 2일 성소수자들이 청계천에 모였다. 1년에 한 번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퀴어문화축제는 ‘변태’·‘비정상’으로 낙인찍힌 한국 동성애자들의 투쟁의 성과이자 1969년 6월 미국 동성애자들이 경찰 권력과 사회에 맞서 투쟁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스톤월 항쟁은 실천과 연대 그리고 대중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성소수자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만큼 퀴어문화축제는 한판 즐기는 축제의 의미보다 저항의 의미가 더 강하다.

2007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의 정치적 요구가 더 뚜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연대사를 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

원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남성 게이 운동 단체 ‘친구사이’는 최근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의 ‘동성애 비정상 발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명박의 입을 껴매는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해외 성소수자 정치인 사진을

공무원 노동자들이 파렴치한 ‘혈세 도둑’인가?

최근 신문·방송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퇴근했다가 밤늦게 다시 돌아와 퇴근 도장을 찍으며 ‘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며, 이들을 ‘혈세 도둑’ 취급했다.

여론의 몰매가 쏟아지자 수원시장은 시간외수당의 단가를 30퍼센트 삭감했고, 성북구청장은 6급 이하는 반액을, 과장은 전액을 반납하게 했다. 감사원은 전체 기관에 대해 수당 편법수급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무원의 봉급은 8·9급이 약 1백만 원, 7급 15년차의 실수령액은

1백60만 원이다. 마흔이 넘은 한 공무원은 수원시의 수당삭감에 대해 “1백60만 원으로 중고생이 있는 4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이 사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부추길까 봐 인상률을 낮추거나 동결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각종 수당으로 달래 왔다.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수당은 ‘눈먼 돈’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인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수당은커녕 일

자리조차 지키기 힘들다. 그래서 신문·방송의 공무원 매도에 동조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수당 삭감과 반납을 지지하는 것은 저들의 인간질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공격은 사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하향 평준화에 반대한다면 각종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개정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신미정

〈맛불〉46호를 읽고

한국인들의 식습관이나 조리법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국인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한국인들은 특정 위험 물질(광우병의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로 분류되는 소의 머리(뇌)와 내장, 척수는 물론 전문가들이 위험 부위로 구분하는 사골·도가나·꼬리·갈비 등을 갈비구이·설렁탕·곰탕·갈비탕은 물론 냉면(육수)과 라면(스프), 조미료(다시다)에 이르

기까지, 고기와 뼈를 같이 굽거나 장시간 우려내는 조리 방법을 사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 끓여 먹는 식습관은, 달리 말하면 광우병 위험 물질을 추출해서 엑기스로 먹는 것이다. 자국민의 건강권을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정부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태현

〈맛불〉45호 김용민 기자의 글과 46호 김어진 위원장의 글에서 오종위

사망 사건을 각각 “자이툰 부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 “자이툰 부대 파병 후 첫 사망”이라고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

자이툰 부대원의 사망은 처음이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에서 2004년 12월 7일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쿠르드족 민병대원 한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 해에 자이툰 영내 컨테이너 도색작업을 하던 정명남 씨가 폭발 사건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김광일

지역사회 포럼

서울 동부

87년 6월 항쟁 20주년: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와 왔는가?

일시: 6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전지윤(주간 〈맛불〉 공동 편집자)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3층(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9731-7299

서울 남부

87년 6월 항쟁 20주년: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일시: 6월 13일(수) 오후 8시
연사: 한규한(주간 〈맛불〉 기자)
장소: 방배1동 주민자치센터 3층(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495-9925

인천

환경 재앙 —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일시: 6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연사: 장호중(주간 〈맛불〉 기자)
장소: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4층 교육실
문의: 010-3083-5508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원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대량해고를 저지한 뉴코아 정규직 · 비정규직 연대 투쟁

이랜드 계열의 뉴코아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계산원 전원에게 사직서를 종용하면서 아웃소싱을 강요하고 있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지난해 주식배당금으로만 82억 원을 챙겼고, 교회에 1백30억 원을 십일조로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랜드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6개월, 3개월 계약을 강요하더니 급기야 ‘1개월짜리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아예 ‘0개월 계약’이라는 신종 노예계약서도 강요했다.

그러나 최초로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일 계산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끝에 다시 복직했다.

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뤄진 뉴코아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기 시작했고,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남동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는 ‘뉴코아강남지원대책위’를 꾸려 연대를 건설하고 있다.



6월 4일에 열린 뉴코아 비정규직 계약해지 반대 기자회견

뉴코아노동조합은 5월 10일 사측의 1차 용역전환 시도를 좌절시킨 데 이어 6월 4일에도 단호한 투쟁으로 용역전환 시도를 막아냈다. 용역강패 수십 명이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내뿜었지만 젊은 여성노동자들은 용역강패들에 맞서 합성을 지르며 저항했고 남성 조합원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정규직 · 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기세에 용역강패들은 철수했고 사측은

6월 10일까지는 용역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6월 10일은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동조합의 파업이 예정된 날이다.

뉴코아의 사례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 준다. 뉴코아의 투쟁은 또, 정규직 · 비정규직 연대 투쟁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신명희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6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현재 전국 7개 지부 1천7백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중이다.

박종모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비조합원도 파업에 동조하고 있어 실제 작업을 멈추는 타워크레인은 60퍼센트를 웃돌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흔히 타워크레인 한 대가 멈추면 같이 일하는 노동자 2백 명이 함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파업이 지속될수록 파괴력은 커질 것이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처지는 이렇게 요약된다.

“10명 중 9명 비정규 임대계약직 신분, 1년에 서너 달은 실업자 신세, 13.3일에 한 번꼴로 재해 발생.”

따라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요구 역시 노동권과 안전권에 관한, 매우 소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주56시간 근무를 주44시간(하루 8시간 근무)으로 단축하라는 것이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타워크레인을 안전장치도 없이 날마다 수직 사다리 오르내리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0.3평 정도의 조종실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으로 각종 직업병을 앓고 있다.” 지난 5년 간 타

워크레인 사고로 무려 1백5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각종 안전 규정을 적용할 것과 타워크레인을 안전한 방식으로 고정해 강풍에 쓰러지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악법과 한미FTA에 맞서는 투쟁을 고무할 것이다.

“민중의 삶을 재앙에서 구하는 6월 대투쟁”을 선포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시작을 타워크레인 파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 · 지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오정숙

한미FTA ‘반대’ 운동

“더 넓고 더 깊게 대중 속으로”

지금은 정치적 양극화와 주류 정치의 위기, 진보 세력의 도약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특히 한미FTA는 양극화의 핵심 쟁점이다. 한미FTA에 대한 찬반은 앞으로 이 나라를 기업들의 이윤과 사람들의 필요 중 어떤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포함한다. 지난 5월 25일 협정문이 공개된 뒤 한미FTA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운동의 기반을 더 넓고 더 깊게 기층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가 개혁 염원 대중들을 접촉하고 한미FTA 저지 운동을 확대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활동은 2주마다 일요일 오후에 진행하는 가가호호 방문과 거리 정치 연설회다.

3월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리플릿 배포와 가가호호 방문, 거리 연설회를 병행한다. 한미FTA 반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류 정치를 폭로하고 진보적 대안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4회까지는 주로 집집마다 리플릿을 배포하는 데 중점을 뒀고 주요 거주지역인 신당동 거의 전 지역(6동까지 있다)에 한미FTA 반대 리플릿을 배포했다.

5회(5월 2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미FTA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진보 지도

벨을 누르기 전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짹짹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명해 준 분들도 있고, 찬성론을 펼치다가 우리의 설명에 설득돼 반대 서명을 한 주민들도 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며 반갑게 맞이해 준 노동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FTA 얘기를 들었다며 흔쾌히 서명해 준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먹을거리를 걱정하며 서명한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지해 주었다. 문을 열어 준 사람들은 대부분 한미FTA에 찬성하던 반대하든 개방적 태도로 우리의 얘기를 들으려 했다.

앞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지속해 한미FTA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지역의 진보 지도를 그릴 계획이다.

그밖에도 중구위원회는 개혁 염원 대중을 만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장 앞에서 리플릿 나눠 주기, 지역 상가를 방문해 대화하고 서명 받기, 지역에서 열리는 주민 행사(주민 체육대회, 걷기대회, 백일장 등)에 참가하기, 노동조합에 한미FTA 반대 대자보 게시하기,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한미FTA 반대 현수막 게시하기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6월 23일에는 지역의 여러 단체와 힘을 합쳐 한미FTA 반대 지역 집회를 열 계획도 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진보 진영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의 저변이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 중구위원회의 활동들은 한미FTA 반대 운동의 확대 · 심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노영민(민주노동당 서울 중구위원회 부위원장)



주요연사>>>

린지 저먼 |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 영국 ‘리스펙트’ 런던 시장 후보
존 리즈 | 영국의 급진좌파 정당 ‘리스펙트’ 사무총장
권영길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화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태인 | 성공회대 겸임교수, 전 청와대 비서관
이강택 | KBS PD
민세원 |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장
정성진 | 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희수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슬람》 저자
유달승 |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저항운동의 축제 맑시즘 2007 7월 14일 (토) – 7월 17일 (화)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 다함께

맑시즘2007은 50여 개의 토론과 진보적 영화, 음악, 사진전 등이 어우러지는 저항운동의 축제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맑시즘’ 웹사이트(<http://www.marxism.or.kr>)를 참조하십시오.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라

협정문 공개 이후 한미FTA의 범죄적 본질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조류독감 닭고기에 대해 '지역화 조건'을 달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특정 주(州)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닭고기 전체를 수입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류독감을 옮기는 철새가 이동하다가 주 경계를 지켜서 멈출 리도 없는데 말이다. 이제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에 이어 조류독감 닭고기까지 우리 식탁에 버젓이 올라올 판이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갈비 두 짝'이 발견되기도 했다. 노무현이 부시에게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결과에 따라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약속한 만큼, 전에는 뼈 조각만 나와도 반송했지만 이제는 반송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너무 황당해 도저히 믿기 힘든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캡코더는 물론 카메라 달린 휴대폰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도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지적권을 위반한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 심지어 포털 사이트까지 폐쇄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 전문 변호사 송기호 씨는 "한미FTA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한국 헌법의 재산권 조항에서 '일탈'인 동시에 재산권 절대적 보호로의 '개헌'"이라고 지적했다.

"타결되면 반대하는 쪽과 밤샘 토론하겠다"던 노무현은 반대 운동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교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6월 2일에 열린 '허세욱 열사 49재 및 한미FTA 전면 무효화 총결기 선포대회' - 한미FTA 반대 운동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 주다

다. '한미FTA 문건 유출 사건'을 조사한다며 심상정 의원 등의 전화·팩스 통화 내역까지 뒤지고 있다.

갈비 두 짝

이것은 범죄적 '묻지마' 협상을 폭로하며 진실을 밝혀내고 앞장서서 반대 운동을 이끌어 온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다. 기자실을 통폐합하며 기자들에게 "발로 뛰며 진실을 캐내라"고 호통치는 정부가 문건 하나 공개됐다고 난리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정말 조사·처벌 받아야 할 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재앙적 협상을 추진해 온 자들이다.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마구 소환하고 출두요구서도 발부하는 야비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5월 30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조폭 재벌 김승연과 더러운 유착을 한 경찰이 한미FTA 반대 운동을 탄압하는 것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출두 요구 대상자들은 6월 투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에서 출두에 응하지 않기로 했고 강력한 투쟁으로 공동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단호한 자세는 범국본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야금야금 공세를 가하는 것은 한미FTA 저지 운동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더 크게 확산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범국본은 6월 2일 전국 각지에서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허세욱 열사 49재를 열고 본격적인 한미FTA 체결 저지 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집회는 한미FTA 반대 운동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전국 집중으로 동원하겠다는 민주노동 지도부는 별로 많이 동원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반대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운동 현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 지도부는 약속한 대로 한미FTA 저지 운동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 노동자가 주체라고 하는데 이번 투쟁에서 보여 줬다. ... 파업을 해도 형식적으로 해선 안 된다. 진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국본은 6월 2일 집회를 시작으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급진화하는 청년들을 더욱 많이 참여시키며 이 운동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서 파업을 조직합시다”

김성락 '금속노동자의 힘' 중앙의장을 만나 한미FTA 반대 투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금속노동자의 힘'은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 속에서 건설된 현장조직으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반대 파업을 제안·결의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을 두고 주류 언론들이 '정치 파업'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조합원들은 보수 언론이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기업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아차 내에도 정치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노

동조합이] IMF [경제 위기] 이후 당장 이익이 될 경제적·실질적 요구가 아니거나 공장 밖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대해선 소극적이고 무관심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활동가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특히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같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결국 격론이 벌어지긴 했지만 현장 대의원들의 압력 속에 정갑득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가결된 정당한 파업입니다.

한미FTA로 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

다. 당장 한미FTA가 체결되면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질 겁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뒤 멕시코의 사례

를 보면 가스·물·철도 요금처럼 생활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한미FTA가 체결돼서 생활비 자체가 대폭 오르면 결국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멕시코 등의 사례를 들며 얘기하면 현장 노동자들이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이나 의료·보건 등 한 부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 민중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이 반대해야 합니다.

한미FTA 반대 파업을 어떻게 건설해야 할까요?

우리는 공동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단을 제안해서 6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출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한미FTA를 막아내야 합니다.

지난 금속노조 중앙위에서는 각 공장별로 실천단들을 제안에서 지회(공장) 특성에 맞게 한미FTA 토론회를 열고 출근 선전전을 하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활동을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노동자 투쟁이 밀리는 싸움을 많이 했지만 이번 투쟁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삼았으면 해요.

그리고 금속이든 공공이든 부문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들이 자본을 상대로 이기는 싸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전체 노동자들이 나설 좋은 기회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말이고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서면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이나 금속노조 지도부가 미온적이라는 핑계로 우리까지 현장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노동이나 금속노조 지도부만 믿지 말고 현장의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나서고 스스로 조직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한미FTA·비정규직 악법 반대
민주노동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

일시 : 6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도심(추후 공지)